

# 국민의힘 지지하던 '30대 남성'이 흔들린다

에스프레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30의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 지난 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2030세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0대는 물론 70대 이상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2030 남성들이 민주당 평균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다만 남성 청년들 안에서도 차이는 있다. 20대 이하가 민주당 지지율도 낮고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이라면, 30대는 민주당 지지율은 낮지만 대통령 직무수행에는 긍정적인 편이다.

요즘 30대 남성은 과거 '이대남'으로 불린 집단이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본래 진보적인 성격을 띠었다. 일례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20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0%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남녀 모두 90%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녀 갈등이 격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탈이 시작됐다. 현재 20대 남성들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보수적 성격을 띠는 유권자 집단이라면, 30대 남성들은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 가 이렇듯 '반민주당 성향의 무당층'

에 가깝다.

이들의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월별 통합 여론조사들을 보면 30대 남성은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약간 보수'.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중도와 온건 보수 사이에 다수가 분포한 셈이다.

비록 남성에 한정된 분석이지만, 보수 정당이 청년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배경은 반민주당·반이재명 정서가 반사이익을 준 측면이 크다. 지난 대

30대 남성은 과거 '이대남' 집단 그들의 대통령·여당 지지율 격차는 모든 성·연령대 중에서 가장 크다 이대로라면 국힘 입지 더 좁아질 것

선이 대표적이다. 보수 진영이 20대 이하 남성의 74.1%, 30대 남성의 60.3%로부터 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이재명 정서는 이번 정부 들어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20%포인트가량 높게 나오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겪인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퇴임 후 안위를 보장받으려면

지지층 밖으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 래서인지 노동·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민주·진보 진영 리더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중도에서 온건 보수까지 포섭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영역대이기도 하다.

실제로 3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격차는 모든 성·연령대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심지어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서 3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59%로 30대 여성(60%)과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록 3월에 다시 벌어지긴 했지만, 두 집단이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였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이대남대 이대녀'로 대립하며 늘 상반된 정치 성향을 보여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세대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4050세대로부터 좀처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86세대가 속속 60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연령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2030 남성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미래 세대를 위한 아젠다가 보이지 않고, 청년 대표라고 내세우는 이들 역시 강성 보수로 채워지고 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한다면 30대 남성마저 동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6]

## 대범하고 단순한 마네의 꽃

1882년,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1832-1883)는 병상에 있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 갔다 꽃다발을 두고 갔다. 마네는 이들을 꽃병에 꽂아 두고 작은 화폭에 그렸다. 이렇게 병상에서 그린 작은 꽃그림이 스무 점이다. 마네는 이들을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까운 컬렉터들이 구입하기도 했다. 그중에는 발명, 탐험, 모험, 사냥, 최면술과 예술을 모두 섭렵한 허풍선으로 유명한 외젠 페르튀제도 있었고, 고급 매춘부로서 살롱을 운영하며 예술가는 물론 정치인과 부유층에게 지적 교류의 장을 제공했던 메리 로랑도 있었다.

마네는 '올랭피아'와 '폴발 위의 점심' 같은 대작(大作)을 통해 파리 상류층의 문란한 삶을 직설적으로 그려내 문화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후 그는 보불전쟁과 파리 코뮌 당시에도 전쟁터가 된 파리를 떠나지 않고 거리의 참상을 냉정한 눈으로 그려 공개한 드문 화가다. 행적으로만 보면 거칠고 반항적인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마네는 파리의 상류층 출신으로, 사교적이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관대했다. 각별

히 지내던 이들의 면면이 다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붓을 몇 번 놀렸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마네는 대범하고 단순하게 그렸다. 그의 손끝에서 갖 피어나 보드랍고 탄력 있는 꽃잎의 다채로운 색상과 물과 햇빛을 함께 담아 맑게 빛나는 꽃병의 질감이 살아난다. 이 그림을 그리고 몇 달 뒤 마네는 오래 앓던 병으로 고사한 다리를 절단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꽃에서는 타는 듯한 그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지기 전에 가장 환하게 빛나는 순간을 그림 속에 붙잡아 두려 했던 화가의 다정한 눈빛과 손길이 느껴질 뿐.



에두아르 마네, 크리스마스 꽃병의 꽃들, 1882년경, 캔버스에 유채, 32.7×24.5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社說

### '중동 사태 에너지 전환 대책'에 원전이 빠지다니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의무화, 신차 40%를 전기차·수소차로 전환 등의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가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보도자료에서 언급조차 없었고 기후부 장관이 구두로 "에너지 믹스 차원의 병행"이라고 원론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

대책은 '원유 공급망이 불안정하니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선 원유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재생 에너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기후 조건이 열악한 한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통제할 수 없는 '기상 리스크'가 크고 효율성도 낮다는 사실이다. 원유 수입이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리지만 재생 에너지 또한 불안정성이 있는 마장까지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다.

이날 '원전 없는 에너지 대책'을 두고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 데 대한 탈원전 세력의 반발을 달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선 현재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국가 전력 수요가 폭증한 현실에서 원전 발전 비율은 30% 초반이다. 1980년대엔 50%를 상회한 적도 있었다.

### '마약 막던 독' 이미 붕괴, 무슨 일든 해야 할 때

최근 강제 송환된 마약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한국에 밀반입한 필로폰은 국민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한다. 그가 감옥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필리핀의 부패 탓이 크지만 한국 내 공범들이 마약 밀반입과 유통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그만큼 마약 문제에 느슨한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 사건이 한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대학에 마약을 유통시킨 재소자가 뒷면에 마약을 바른 우표를 구치소에 들여오다가 적발되더니 이번엔 구치소 수용자의 짐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재소자가 필로폰 봉투를 옷속에 숨겨 구치소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구치소까지 마약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면 밖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에서 마약은 더 이상 은밀하게 유통되는 약물이 아니다. 해외 직구 등으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선 마약 제조법까지 알려준다. 필로폰 등 기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과 마약성 의약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마약이 국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원인이다. 본지 취재팀이 주말 서울 유흥가 클럽을 취재했다니 장내에 알약 포장재와 알

세계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심지어 과거 사고가 있었던 스리마일 섬에서조차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본과 유럽 역시 원전을 탄소 중립과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복권시켰다. 이들의 원전 유턴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던 원전은 그사이 그 후 에너지를 지향해 줄 '안전벨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도 다를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현실적 한계와 비용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전력은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ESS(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막대하다.

이번 중동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분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원의 확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만 당장 여기에 우리 산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세운 원전 건설 계획은 더 확대해 나가고, 차세대 원전으로 인정받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과 건설도 더 서둘러야 한다.

코골 숨이 나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유흥가에선 "마약 배달이 짜장면 배달보다 빠르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마약을 막던 독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 20명인 유엔의 마약 청정국 기준은 2015년 넘어섰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작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403명, 인구 10만명당 45.3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3년 연속 2만명이 넘었다. 마약이 널리 퍼진 현실을 반영한다.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건 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마약 범칙은 투약과 유통만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 일으키는 살인, 폭행, 성폭행, 절도 등 2차 강력 범죄로 쉽게 이어진다. 일부 남민, 동남아 국가는 마약에 관대했다가 땅국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이런 일에는 국민 세금을 아끼면 안 된다.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정부 지정 병원 31곳 중 14곳은 전문가가 없어 작년에 한 명도 치료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정 병원의 병상도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 유통을 강력 차단하고 마약 사범의 정상적 사회 복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재정 전제 달라진 현실 알고도 '2차 추경' 얘기하나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 환율, 성장률 등 나라 살림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들이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전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2% 경제성장률과 2.1% 물가 상승률을 전제하고 총지출을 작년보다 8.1% 늘려잡았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2달러로, 환율은 달러당 1400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유가와 환율,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세입이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두바이유 가격은 110달러대로 올라갔고,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았다. 물가도 급등 조짐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재정장이 예상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1%대 후반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올 예산안에 반영된 당초 전망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예산에 108조원 규모

로 책정했던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뜻이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면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26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돈 쓸 생각부터 먼저 한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꼭 써야 할 돈은 쓰지, 다른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단기적 돈풀기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2차 추경부터 거론하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 교회 탄압하고, 언론 입들막 하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 이게 민주주의냐?

뉴데일리 newdaily.co.kr

민법 개정안 → 종교의 자유 탄압 | 입들막 3법 → 표현의 자유 억압 | 5.18 특별법 → 사상의 자유 제압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된(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모습. © 사진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 행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해산

4월 1일 국회의사당.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총반위) 주관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헌법 보장 종교의 자유 수호 집회. 총반위 대표(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사무총장(안석문 아침 교회 목사)과 전국 1만여 기독교인·목회자들이 참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좌파 최혁진 발의, 좌파 의원 다수 가담)이 교회 강제 해산과 재산 국고 환수 규정을 신설한 것을 규탄했다.

개정안 38조는 주무관청이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극히 모호하다. 정당한 발언이나 신앙 활동조차 정권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정권이 법인의 업무-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법인에 출입시켜 장부·서류를 검사, 교회에 대한 정부의 상시적 감시와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재산도 모두 국가에 귀속토록 했다. 종교 자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징벌적 성격의 재산권 침해이다.

## 대한민국이 중공(中共)인가

연사들은 반헌법적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국교 분리》의 오역(誤譯).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가 종교의 입을 막기 위해 썼던 논리로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을 환수하려 한다." - 손현보 세계교회회 목사

"영장 없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해 교회를 해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 - 신홍백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목사

"권력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맹목성 조항투성이. 통과 되면 전도-선교 활동조차 통제하는 중국 형법 300조나 러시아 야로바야법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 - 김정민 금란교회 목사

"한국교회를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전락시키려는 시도. 중국은 종교를 국가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 설교와 교리를 통제한다. 한국도 같은 출발선에서 있다." - 이태희 그안예진교회 목사

최광희 목사가 규탄 성명을 낭독했다.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란 명분을 내세우나, 실상은 정권 눈 밖에 난 어떤 교회든 탄압-폐쇄시킬 수 있는 사악한 법 /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수색하고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 종교재산 국가 몰수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종교

말살 / 정교분리는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을 차단하고 식민지배에 순응케 하려고 왜곡시킨 《포교 규칙》이 뿌리. 국교분리는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가 목적. 개정안은 종교를 행정 통제 아래로 장악하는 현대판 포교 규칙이자 독재적 발상."

## 입들막 3법 시행 → 더 이상 민주국가 아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들막 3법》도 악법. 박주현 변호사와 한미 자유변화사 연대의 《정보통신망법》(수퍼입들막법) 《5.18 특별법》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유포죄》를 입들막 3법으로 규정. 헌법소원 및 미 국무-재무부 제소 국민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소조항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중과실이란 주관적 잣대로 실제 손해의 5배를 배상.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도 최소 5천 만 원 부과. 민사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을 파괴하는 경제적 사형 선고이자 이중 처벌. 재물 몰수 추정 :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얻은 이익(유튜브 수익 등)을 몰수. 마약 뇌물 범죄에나 쓰던 몰수를 말과 글에 적용. 재산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비방 목적이 있다면 처벌. 공직자 비리 폭로 막는 방탄 조항. 임시 조치 강제화 : 요청만 있으면 최장 30일간 게시물 차단. 공적 인물 검증 원천 봉쇄하는 사전 검열 행위."

## 제2의 홍콩-베네수엘라 되고 있다

《5.18 특별법》 사상 통제 처벌 조항 문제점. "위헌성 : 국가 주도의 진실 강요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부정하는 것. 학문적 탐구와 비판 정신을 형벌로 다스리는 현대판 분서갱유. 특정 정치세력을 특권화하는 공산주의적 법안."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독소조항 비판. "위헌성 : 부정선거 의혹 제기 원천 차단. 부정선거 고착화 시키고, 처벌의 공포로 스스로 입 닫게 만드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발생. 부정선거 세력이 장기간 독재하려 하는 것."

박 변호사와 한미 자유변화사 연대의 호소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비명 지를 자유조차 사라진 '제2의 베네수엘라'에서 살게 될 것."

표현의 자유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입들막 3법》이나 《종교 법인 해산법》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과 언론이 깨어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자유를 지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4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

